

2013년 제2차 경찰시험(형소법)해답									
(광주)서울경찰학원 백거성 교수님의									
문제풀이+ 짝기 특강에서 100% 완벽적중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①	④	④	③	④	③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①	②	②	①	②	④	②

1. 정답: ③

해설: ③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이 적용된다.

2. 정답: ③

해설: ③ 체포된 피의자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 없다. 즉, 피의자보석결정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적용된다.

3. 정답: ①

해설: ①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라도 간통자에 대한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4. 정답: ④

해설: ④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5. 정답: ④

해설: ④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된 경우는 재구속제한의 위반과 무관하므로 적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6. 정답: ③

해설: ③ 갑이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더라도 피의자라는 적부심청구인적격은 개시요건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이유로 기각하여서는 안된다.

7. 정답: ④

해설: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8. 정답: ③

해설: ㉠,㉡,㉢이 옳은 지문이다.

9. 정답: ④

해설: ④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

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2009헌마 257)

10. 정답: ④

해설: ④ 형법에 의하여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시효를 적용한다.

11. 정답: ②

해설: ② 피의자신문에 대한 영상녹화는 사전고지만 있으면 되고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12. 정답: ②

해설: ㉠,㉡이 옳지 않은 지문이다.

㉠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

13. 정답: ③

해설: ③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 성립의 진정만으로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할 수는 없다.

14. 정답: ①

해설: ①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이기만 하면 사물관할은 따지지 않는다.

15. 정답: ②

해설: ㉠,㉡,㉢이 옳은 지문이다.

㉠ 제312조 제3항 ㉡ 증거능력없는 전문증거라도 적법성과 임의성만 전제되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조사자 증언(제316조 제1항)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원진술자인 공범자 乙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인정한다해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영상녹화물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이 있더라도 여전히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6. 정답: ②

해설: ①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으로 동의가 있어도 여전히 위법이다. ④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지문채취대상물의 위법한 압수이전에 채취한 지문은 증거능력있다.

17. 정답: ①

해설: ①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자백을 내용으로 하므로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18. 정답: ②

해설: ㉢,㉣이 옳다.

㉠ 국참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희망여부에 대한 상당한 숙고기간이 사전에 부여되었다면 피고인이 이의없다는 의사에 의해 하자가 치유된다. ㉡ 국민참여재판대상범죄가 아니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19. 정답: ④

해설: ④ 외국공무원작성의 서류도 제315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외국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에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20. 정답: ②

해설: ① 공소제기의 의사도 없고 공소장제출도 없는 경우로서 공소제기가 불성립하는 경우이다. ③ 즉결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한다. ④ 유치명령은 7일이 아니라 5일